



우리는 10년후 어떤 농업·농촌을 가지려는가?

농정목적 달성 못한 진지한 반성 없고 도농간 소득격차 더 커져,
지금은 국가간 농업체제 경쟁시대, 갈등·방황 접고 미래로 향해야

■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농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렵고, 농촌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확대되는 시장개방에 두려움을 넘어 막연히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뿐 아니다. 일반국민들도 농업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언제나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을 잘살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지만 언제나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만다.

정부는 42조원의 농업·농촌종합개발계획이니 15조원의 농특세사업이니 45조원의 농업·농촌발전계획이니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개발계획이니 하여 끝없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신품종과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과 신품종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식품개발연구원, 농업계 대학들도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은 농민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아니 더 심화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가능성도 없는 농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비난을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이런 수밖에 없는가? 지금의 우리 농업·농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농업·농촌인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농정의 흐름과 우리 농업계의 자세로 10년 후 우리는 어떤 농업·농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참담한 지난 10년 농정의 성과

지난 3월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 농업투자의 결과 농업기반이 조성되었고, 소비자들이 사시사철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생산성증대가 농가소득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변명이나 변명을 하고 넘어갔다.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왜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 농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확대되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할진데, 그동안 농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농민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가소득은 근 10년 전부터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995년의 농가 평균소득은 2180만원이었는데, 2002년의 소득은 2448만원이다. 통계상의 단순 금액은 7년 동안에 12% 증가한 것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소득은 연 1.7% 감소했다. 이 동안에 도시근로자기구 소득은 2300만원 수준에서 3550만원으로 54%나 증가했다. 그 결과로 도시근로자기구 소득에 비교한 농가 소득은 1995년 95%에서 2002년에는 73%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농가부채는 1995년 916만원에서 2002년 1960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의욕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참여했던 젊은 농업인들은 더 많은 부채에 발목이 잡혀 실의에 차있다는 사실이다. 평생을 일해도 못다 갚을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런 죽음을 채워두는 '금융의 원칙'이란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농촌은 이제 거대한 양로원이 되었다며

걱정한다. 농촌에서 50대는 청년이고, 60대는 노인 축에 꺼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들린지 오래 되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시·군이 30개소나 된다고 한다. 1년이 지나도 갓난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면이 몇 개나 된다고 했던가? 농가경영주의 나이가 40세를 넘는 농가가 95%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농업을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나이에 이들을 어디로 내보내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의 농촌을 상상해 보았는가?

UR협상 타결이 확실해지면서 우리 농정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지만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10년 전 UR협상대책을 만들 당시 전문가들은 우리 농산물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품목으로 배를 꼽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배의 품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배는 경쟁력이 높아지기는커녕 외국산에 비해 품질에는 차별이 없고, 가격은 절대적인 열세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추진한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배 특성화대학 지정 및 육성사업 등 기술개발과 경쟁력제고 대책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가장 유망했던 배의 경쟁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원예연구소와 각 도 시험장은 무엇을 했는가? 수급조정 및 유통혁신은 불가능하며, 과당 수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유통·수출업자의 문제인가, 농민의 문제인

기? 농협은 도대체 무얼 하기위해 존재하는가? 언제까지 경제사업은 팽개치고 선용사업에 매달리게 놔둘 것인가? 병해충진단이 그렇게 어렵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무인가? 기초적인 시험포도 못 만들 정도로 연구예산이 부족한가?

지난 10년 농정의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농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고 농산물의 경쟁력도 나아진 게 없다. 우리가 이럴 때 중국은 우리를 바싹 따라붙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이 대기업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머지않아 저질품에서 탈피하는 중국농산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농업계 밖에서는 돈을 쏟아붓는다고 야단인데, 10년 동안 추진한 농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었던가?

지금은 국가간 농업체제 경쟁시대

세계경제는 일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철저한 경쟁체제로 가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쌀 소비가 견잡을 수 없이 줄어드는데도 의무수입량은 크게 늘어나고 수입쌀이 시장에서 팔리는 쪽으로 쌀 협상의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금년 4월 한·칠레 FTA협정이 발효되었지만 고위정책당국자는 앞으로 한·중·일 FTA협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동시다발적인 FTA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농업은 DDA협상에서 선진국으로 개방을 하면 5년 이내에, 개발도상국으로

개방을 하면 10년 이내에 대체 개방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관세가 높은 품목은 관세를 대폭 감축하자는 것에 이미 WTO회원국들이 합의를 했다. 더구나 이행 초년도에 관세를 일률적으로 20%를 깎자는 데도 합의했다.

우리 농업은 수 년 내에 우리보다 10배, 100배 영농규모가 큰데다 농업기술에서도, 생산·유통시스템에서도 앞서는 선진국과 거의 맞상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1/10의 생산비로 비슷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국과 거의 맞상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엄청난 격차를 지금의 정책, 지금의 자세로 극복할 수 있을까?

판매대 위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국내외 농산물은 단순히 어느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농업과학기술, 생산·유통체제가 만들어낸 '체제의 상품'이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 상품을 생산·공급한 체제 전체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체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농업문제가 단기적으로는 농민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전체의 문제요, 나아가서는 국민전체의 문제이다. 농민과 농협은 당연히 하나여야 하고 정부, 연구지도 전문가, 관련 산업 종사자도 한배를 타고 있다. 소비자도 결코 농업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모두가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결코 이 치열한 체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기술과 협동 그리고 창의

시장개방이 어떠한 형태로 다가오더라도 우리 농업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른 방법과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무리 투·융자 규모를 늘리고 전문가들이 엄정하게 심사·평가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법과 마음자세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우리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아무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생산·유통체계를 가져야 한다.

첫째, 농민들이 하나로 협동하는 것이다. 협동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힘을 발휘한다. 생산자들이 크게 협동하면 거래 교섭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물류비와 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 개별농가들의 영농규모가 작더라도 품목별, 지역별로 충분히 크게 협동하면 아무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고도의 생산 및 수확 후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과 품질 면에서 수입농산물보다 월등히 나은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하나로' 뭉친 조직과 최고의 전문가그룹 간에 긴밀한 산·학협동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현장과 밀착되지 않은 기술개발정책으로는 월등히 나은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

셋째, 각 지방의 문화와 전통, 환경적인 특성을 살려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독창성

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 나라와 각 지방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고 기후, 환경 및 생태환경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독창성으로 성공한 벤처농업인이 수천 명 있다. 어떤 국가나 지방도 가지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의 무기이다.

넷째, 농민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며, 창의정신도 발휘되지 않는다. 농민조직이 정부는 물론 분야별 전문가와 대등한 수준에서 정책과 기술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보완되게 해주어야 한다.

갈등·방황 접고 미래 향해 나가야

우리는 세계최고의 농업시스템을 실현해야 한다. 아무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농업 기술, 효율적인 생산 및 마케팅시스템, 그리고 변함없는 소비자의 사랑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결코 쉽게 구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뚜렷한 정책 목표를 설정,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농업계 전체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10년간 투입될 재정 규모가 대충 정해진 지금, 우리 농업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 농업계의 몫이라 할 수 있다. 하루 빨리 갈등과 방황을 접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농악정보**